

#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7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0.

발 의 자 : 위성곤 · 이개호 · 황주홍  
이찬열 · 윤후덕 · 진선미  
윤관석 · 백재현 · 이양수  
김성찬 · 조배숙 · 홍문표  
정인화 · 이용득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

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‘기본법’적 규정과 ‘집행법’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,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 주요내용

가. 이 법률의 목적을 “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

고,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, 개선, 대응,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”으로 함(안 제1조).

나. “해양환경”, “해양오염”, “해역관리청”의 용어정의를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(안 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20호).

다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율하고 있는 ‘국가의 책무’(제5조), ‘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’(제6조), ‘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’(제7조), ‘해양환경기준’(제8조), ‘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’(제14조), ‘해양환경보전협회’(제125조)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.

라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,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,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,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5조 및 제84조).

마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,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(안 제12조,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

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7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선박, 해양시설,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,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, 개선, 대응,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·제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해양환경”이란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.
2. “해양오염”이란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.
20. “해역관리청”이란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장제1절의 제목 중 “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”를 “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·조사 등을”을 “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”로 한다.

제10조 전단 중 “해양환경상태를 조사·평가함에”를 “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·분석을”을 “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정도관리를”로, “필요한 조치(이하 “정도관리”라 한다)를”을 “필요한 조치를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정도관리기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, 취득 자료의 처리 및 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(이하 “정도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정도관리계획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

실시기관(이하 “조사기관”이라 한다)은 제12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,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장제2절의 제목 중 “해양환경종합계획”을 “환경관리해역의 지정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·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조제1항의 규정에”를 각각 “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”로 한다.

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해역이용의”를 “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”로 한다.

제125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해양환경”이라 함은 <u>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(海洋水)·해양지(海洋地)·해양대기(海洋大氣)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해양오염”이라 함은 <u>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선박, 해양시설,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,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, 개선, 대응,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해양환경”이란 「<u>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해양환경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해양오염”이란 「<u>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u>해양오염을 말한다.</u></p>



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 
상태를 말한다.

3. ~ 19. (생략)

20. “해역관리청”이란 「영해  
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  
및 내수의 경우에는 해당 광  
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  
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 
한다)로 하며, 다음 각 목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
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

가. 「배타적경제수역법」 제  
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  
제수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  
는 해역

나.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  
안의 해역

21. ~ 22. (생략)

제5조(국가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 
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 
인한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훼손된  
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 
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·관리  
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 
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에서의 개발·이용행위  
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

3. ~ 19. (현행과 같음)

20. “해역관리청”이란 「해양환  
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  
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해역  
관리청을 말한다.

21. ~ 2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행위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환경의 보전·관리와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

및 국제협력의 촉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관리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·관리,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

<삭 제>

런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 
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  
단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참  
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  
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 
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 
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
따른 국제협력 사업의 종류와  
공동 참여기관 및 지원 등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
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)

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  
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  
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(이하  
“오염원인자”라 한다)는 훼손·  
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  
임을 지며, 해양환경의 훼손·  
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 
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  
칙으로 한다.

제1절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

제8조(해양환경기준) ① 해양수산  
부장관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<삭 제>

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  
리 등

<삭 제>

제13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고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의 기준(이하 “해양환경기준”이라 한다)을 해역별·용도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양환경기준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 안에서의 해양자원의 적정한 이용·개발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기준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정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해양환경측정망) ① 해양수  
산부장관은 연근해의 해양환경  
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·조사  
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 
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  
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 
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) 해  
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 
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 
구성·운영 등 해양환경상태를  
조사·평가함에 있어서 그 정확  
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  
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  
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환  
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 
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제1항  
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  
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  
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  
표준의 내용에 따른다.

제11조(해양환경정보망) ① 해양  
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  
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  
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

제9조(해양환경측정망) ①-----  
- ----- 「해양환경 보전  
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 
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  
사를 시행하기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) -  
-----  
-----  
----- 해양환경 관련  
조사 및 평가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해양환경정보망) ①-----  
----- 「해양환경 보전 및  
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 
따라 -----

-----

-----

제12조(해양환경 측정·분석기관  
의 정도관리) ① 해양수산부장  
관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  
양환경의 측정·분석을 위하여  
해양환경상태를 측정·분석하는  
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 
관(이하 “측정·분석기관”이라  
한다)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  
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·분  
석능력의 평가, 관련 교육의 실  
시 및 측정·분석과 관련된 자  
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(이  
하 “정도관리”라 한다)를 할 수  
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정도관리기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, 취득 자료의 처리 및 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(이하 “정도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– 15 –

<신 설>

제2절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 
제14조(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 
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 
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

의 내용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 
제12조의3(정도관리계획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(이하 “조사기관”이라 한다)은 제12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,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 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.  
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이행의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 
<삭 제>

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해양환경종합계획은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에  
    측에 관한 사항
2.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 
    방향에 관한 사항
3. 해양오염의 예방 및 해양환  
    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  
    한 사항
4.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재원확  
    보에 관한 사항
5. 해양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  
    에 관한 사항



6.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과학 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환경관리해역의 지정·관

제15조(환경관리해역의 지정·관

리)

① (생 략)

1. (생 략)

2. 특별관리해역 : 제8조제1항  
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 
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 
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 
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 
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 
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 
(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  
치는 육지를 포함한다)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  
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  
원을 측정·조사한 결과 제8조  
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  
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 
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  
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 
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  
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 
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
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  
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  
원을 측정·조사한 결과 제8조

리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특별관리해역 : 「해양환경  
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 
제13조제1항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「해양환경  
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  
13조제1항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「해양환경

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~ 2. (생 략)

④ (생 략)

제84조(해역이용협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·허가 또는 지정 등(이하 “면허등”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처분기관”이라 한다)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(이하 “해역이용협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.

1. ~ 6. (생 략)

② ~ ⑥ (생 략)

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해역이용협의) ① -----

---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5조(해양환경보전협회) 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·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의 조직·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삭 제>